

한·러 수교 30주년 평가 및 과제: 정치·외교 분야

고 재 남(유라시아정책연구원 원장)

1. 서론

- 한·러 양국은 2018년 6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문으로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외교관계 정상화 30주년인 2020년을 ‘한·러 상호 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양국에서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음.
- 그러나 2020년 초부터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 19(COVID-19)’ 대유행(pandemic)은 푸틴 대통령의 방한 등 양국이 합의한 외교 및 다양한 행사를 연기 또는 축소시키고 있음.
- 한국은 소련방 붕괴 후 북핵문제의 해결 및 한반도 평화통일의 달성,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통한 선진국으로 발전과정에서 러시아와의 협력관계 구축이 불가피함을 인식, 대러 협력 관계를 확대·심화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왔음.
- 그러나 지난 30여 년간의 한·러 외교 관계는 협력과 갈등, 접근과 정체 등의 이중주를 경험했으며, 현재는 초기 또는 중간 단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에 머물러 있음.
- 다행히 2017년 5월 대러 협력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 신북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러 협력이 활성화되어 왔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음.
- 본 글은 한·러 외교관계 정상화 30주년을 양국관계 발전에서 새로운 ‘도약(take-off)’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지난 30여 년간 우리 정부의 대러 정책을 평가하면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의 발전을 가속화, 공고화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2. 한국의 대러 정책의 현황 및 평가

가. 노태우 정부(1988-1993)

(1) 현황

- 한·소 관계에서 노태우 정부의 가장 큰 업적은 1985년 3월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의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취임과 뒤이은 국제 정세의 급격한 탈냉전화와 탈공산화에 대응해 ‘북방정책’을 적극 추진, 한국의 외교 지평을 공산권으로 확대시켰다는 점임.
- 소련은 북한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988년 9월 개최된 서울올림픽에 참가했으며, 이는 소련 외교계는 물론 정치·경제계에 한국과의 외교관계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음.
- 서울올림픽 직후 한·소 외교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이 급속도로 진행되었음. 1990년 6월 노태우·고르바초프 대통령 간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1990년 9월 30일 유엔본부에서 양국 외무장관 간 한·소 외교관계 정상화를 공식화하는 공동성명이 발표되었음.
 - 한·소 수교는 한국 내 각 분야에서 ‘소련 바람(일종의 소련 알기와 한·소 협력 및 교류의 급격한 촉진)’을 불러 일으켰으며, 다양한 형태의 협력 사업과 교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음.
-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1991년 4월 제주도를 방문해 노태우 대통령과 실무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고르바초프는 ‘한·소 우호·협력 조약’ 체결을 제안하였음.
- 소연방의 갑작스런 붕괴는 한국으로 하여금 새로운 對러 정치·외교 관계를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음. 한국은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사임한 후인 1991년 12월 27일 러시아를 소련을 국제법적으로 계승한 국가로 인정하면서 ‘한·소 외교관계’를 ‘한·러 외교관계’로 계승시켰음.
- 한·러 양국은 1992년 11월 18-20일 엘친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전문과 15조로 이루어진 「한·러 기본관계조약」을 체결하고 27개항의 공동성명과 「한·러 군사교류에 관한 의정서」를 교환함. 이로써 양국은 정치·외교 관계의 설정이라는 초기 단계에서 우호·협력 관계의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립하였음.

(2) 평가

-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은 당시 변화하는 국내외 정세를 잘 활용하여 외교관계 단절 85여 년 그리고 남북분단이라는 냉전적 한반도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소 수교를 가능케 한 탁월한 외교·전략이었음.

- 또한 노태우 정부는 러시아와 ‘한·러 기본관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과거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선린·우호·협력 관계로 양자 관계를 전환시켰음. 그리고 양국 간 제반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추진·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그러나 노태우 정부의 경협차관(30억 불) 제공을 통한 한·소 관계 정상화 정책, 즉 정치·전략적 접근은 이후 한·소/한·러 관계를 상당기간 왜곡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물론 경협차관 제공이 부정적인 측면만이 있는 것은 아닌데, 대소 소비재 차관(4억7천200만 불 집행)은 1991년 초부터 현재까지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 옛 소련 지역에서 한국 상품, 특히 전자제품이 현지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제품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해 옴.
- 그리고 노태우 정부는 외교관계 정상화 직후 소련/러시아가 한·소/한·러 관계에서 추구하는 우선적 국익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소련과의 외교관계 정상화를 통한 공산권으로의 외교지평을 확대하고 북한문제의 해결과 같은 외교·안보 이익에 우선성을 부여하는 등 양국관계를 진전 시킴에 따라서 양국 간 불협화음이 발생할 소지를 묵과하였음.
 - 소련/러시아는 대 한국 관계에서 북한과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무시하면서까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통상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였음.
- 또한 양국관계가 점차 정상화되어감에 따라 KAL기 격추사건의 배상 문제, 대사관 부지교환 또는 배상 문제, 그리고 이미 집행된 경협차관의 상환 및 집행지속 여부 등과 같은 현안들이 제기되면서 한·러 관계는 소강상태에 빠졌음. 특히 소련방 붕괴 후 러시아가 직면한 정치·경제·사회적 혼란도 한국 정부 및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러 접근의지를 약화시켜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나. 김영삼 정부(1993-1998)

(1) 현황

- 김영삼 대통령은 1994년 6월 초 러시아 방문을 통해 한·러 관계를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키자는 ‘모스크바 공동선언’을 채택하였음.
 - 당시 양국 정상은 정상 간 긴밀한 대화를 유지하기 위해 청와대와 크

레플린 간에 직통전화(Hot Line)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음.

- 김영삼 정부는 이후 모스크바 공동선언의 내용을 실행시키기 위한 제반 분야에서의 대러 외교협력을 강화시켰음.
 - 그 결과 체르노미르딘(Viktor Chernomyrdin) 러시아 총리가 1995년 9월 중 방한하였고, 이를 계기로 양국은 경제·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협정들을 체결하였음.
 - 또한 김영삼 정부는 러시아와 1995년 대사관 부지교환 문제, 경협차관의 상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대체적으로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년 7월 그라초프(Pavel Grachov) 국방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군사협력 및 인사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하였음.
- 러시아는 또한 한국의 월드컵 유치를 지지하였으며, 유엔(UN: United Nations) 등 국제무대에서도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였음. 한국도 러시아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가입 및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참여를 원칙적으로 지지하였음.
- 김영삼 정부는 러·북 관계를 군사동맹관계에서 통상적인 외교관계로 전환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였고, 그 결과 러시아는 북한과 1961년 7월 체결한 「조·러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을 「한·러 기본관계조약」과 유사한 조약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사를 1995년 8월 초 북한 측에 통보하였음.
- 한편 1996년 4월 한·미 양국 대통령이 제안한 ‘한반도 4자회담’에서 배제된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양국간 외교관계가 일시적으로 불편해지기도 했음.
- 이후 김영삼 정부는 러시아가 대한 관계에서 가장 불만으로 삼고 있는 경제협력의 확대 및 투자증대를 위해서 정부 차원의 노력을 경주하였음.
 - 그 결과 1997년 7월 서울에서 ‘한·러 경제·과학·기술 공동위원회’와 외무장관 회담이 개최되었음. 특히 1997년 7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러 외무장관회담 시 양국 간 정치·외교 협력관계를 규정한 「한·러 공동성명」을 채택했고, 그 결과 양국 외교부가 지원하는 ‘한·러 포럼’이 시작됨.

(2) 평가

- 김영삼 정부는 국내외 사정으로 일시 소강상태에 빠졌던 한·러 관계를 새로운 협력관계로 발전시키자는 정상 간 합의를 이끌어 내었음.

- 그러나 김영삼 정부가 러시아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략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러시아에 사전 협의 또는 통보도 없이 정전협정의 당사국들만이 참가하는 ‘한반도 4자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은 일시 한·러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그 결과 1996년 10월 1일 발생한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 주재 최덕근 영사 피살사건이 발생한 후 러시아가 수사에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서 사건이 미궁에 빠지자 한·러 간 불협화음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 결론적으로 김영삼 정부 시기 한·러 관계는 한편으로는 총선(1995년 12월) 및 대선(1996년 6-7월), 열친의 심장병 수술(1996년 11월) 등과 같은 러시아 국내 정세, 러시아의 대미, 대중, 대일 등 주요 강대국에 대한 외교 우선주의, 다른 한편으로는 북핵문제 및 4자회담 등과 같은 한국외교 당면 현안의 탈러시아화, 러시아의 APEC 미가입에 따른 양국 대통령의 회합 기회 축소 등 때문에,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5월 정상회담이 개최될 때까지 4년 동안 정상회담이 부재하는 등 일시적인 소강상태에 빠졌음.

다. 김대중 정부(1998-2003)

(1) 현황

- 한·러 관계는 1996년에 접어들면서 양국의 국내외 정세에 의해 급속히 냉각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1998년 2월 출범한 김대중 정부 들어서 동년 7월 정보 외교관 맞추방 사태로 비화되었음.
- 즉 러시아 정부는 1998년 7월 3일 사전예고 없이 조성우 주러 한국 대사관 참사관을 ‘비우호적 인물(persona non grata)’로 규정해 3일 내 추방한다는 명령을 내렸음. 한국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면서 아브람킨(Oleg Abramkin) 주한 러시아 대사관 참사관을 맞추방하는 조치를 7월 8일 발표하였음.
- 동년 9월 17일 홍순영 장관과 아파나세예프(Evgeny Afanasiev) 주한 러시아 대사가 양국 간 외교분쟁으로 치닫는 정보 외교관 상호 추방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2개월 이상을 끌어 온 양국 간 외교분쟁은 일단락되었음.
- 김대중 정부는 소원한 한·러 관계가 상호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대러 관계 개선을 적극 모색하였고, 1999년 5월 모스크바

에서 한·러 정상회담을 개최해 양국 간 실질적 동반자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조치들을 실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음.

- 동 정상회담에서 엘친(Boris Yeltsin)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하였으며, 김대중 대통령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한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이후 러시아에서의 제1기 푸틴 정부 탄생과 한반도에서의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양국 당국자들로 하여금 상호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켰음.

- 그 결과 2000년 양국 정상 간 수차례의 전화통화가 이루어졌고, 2000년 9월 김대중 대통령은 유엔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주변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경제분야 등 제반분야에서의 실질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음.

○ 한·러 양국은 2001년 2월 서울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을 계기로 ‘**건설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동반자관계**’의 심화·발전 추진을 명문화한 ‘한·러 공동선언’을 발표하였고,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 나호트카 공단 건설 및 수산협력 등 실질 협력 증진방안을 협의했으며, TSR-TKR 연결사업 등 남·북·러 3각 협력에 대해서도 협의하였음.

(2) 평가

○ 김대중 정부의 대러 정책은 전임 정부에서 크게 악화된 한·러 관계를 복원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김대중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러 관계 개선 정책은 대통령 자신의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현실적인 전략 환경, 그리고 대북포용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변국들의 협력 필요성 등에 대한 인식 등에 기인하였음.

○ 그러나 김대중 정부가 ‘한·러 공동성명’에 ABM 조약에 관한 러시아 측의 입장을 지지하는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미국의 비판을 자아냈으며, 그 결과 이정빈 외교부 장관이 책임지고 사임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음.

○ 또한 김대중 정부의 대러 관계 개선을 위한 조급증은 과도한 對러 협력 공약(예: 잠수함 2척 구입약속)을 남발하였고, 이것이 실질협력으로 구체화되지 않으면서 양국 간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라. 노무현 정부(2003-2008)

(1) 현황

- 한·러 관계에서 노무현 정부의 가장 큰 성과는 2004년 9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관계를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mutually trustful and comprehensive partnership)’로 격상시키면서 과거와 달리 제반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강화시켰다는 점임.
- 노무현 정부는 북핵문제의 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더 나아가 동북아 안보공동체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가 필요함을 인식, 對러 외교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음.
 - 이는 6차례에 걸친 정상회담과 직접 통화, 그리고 총리회담(2006년 10월 17일, 서울) 및 외무장관 회담이 개최될 때마다 양국이 북핵문제 등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공통된 입장을 밝히고, 러시아가 한국의 대북 정책을 지지해 온 것이 증명해 주고 있음.
- 한편 노무현 정부는 한·러 간 실질협력이 잠재력과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감안해 제반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을 채택하기 위한 대러 외교를 강화하였고, 그 결과 2005년 11월 부산 APEC 정상회담 시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간의 경제·통상 협력을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하였음.
- 노무현 정부는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의 장애물로 작용하던 한국의 對러 경협차관 상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체이자를 탕감하는 등 전향적인 정책을 추진 2003년 9월 미상환 채무재조정을 위한 양해각서를 채택해 해결하였음.
 - 한국은 연체이자 포함 총 22.3억 불 채권 중 연체이자 6.5억 불을 탕감하고 나머지 15.8억 불 중 2.5억 불은 2006년까지 상륙작전용 수륙부양정, BMP 장갑차 등 방산물자로, 그리고 나머지 13.3억 불은 2007년부터 23년 동안 원금, 이자를 분할 상환하기로 합의하였음.
- 대러 에너지·자원 외교의 경우, 노무현 정부는 ‘행동계획’ 내 “에너지 및 천연자원 협력” 조항을 포함시켜 양국 간 에너지·자원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강화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음.

(2) 평가

- 노무현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 때보다 한·러 관계에서 실질적 성과를

많이 거두었음은 물론 향후 한·러 간 실질협력 확대에 토대를 쌓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기인함.

- 노무현 정부는 과거 정부의 대러 정책과 한·러 현황에 대한 미래지향적 성찰을 하면서 보다 현실적인 관계 정립, 즉 ‘상호 신뢰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음. 이는 역설적으로 과거 정부하의 한·러 관계에서 양국 간 상호 신뢰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노무현 정부하에서는 양국 간 신뢰구축과 이를 위한 실질협력 강화, ‘말과 행동 원칙’의 준수가 무엇보다도 요구되었음.
 - 노무현 정부는 주변 4강에 대한 ‘실용적 균형외교’를 추진했으며, 이를 위해 대러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었음.
 - 또한 2003년경부터 국제사회에서 나타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 대두는 노무현 정부로 하여금 에너지·자원 외교를 적극 추진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그 결과 대러 에너지·자원 외교가 증시되었음.
 - 마지막으로, 푸틴 정부 들어서 러시아의 강대국으로의 재부상은 노무현 정부로 하여금 러시아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인식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하였음.
- 또한 노무현 정부의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의 장애물로 작용하였던 차관 문제의 해결은 한·러 경제협력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음.
- 예를 들어, 한국의 대러 수출은 2007년 80.9억 불을 기록하여 2000년 대비 10배 이상 급증했으며, 그동안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던 對러 투자도 2006년도에 전년 대비 195%가 증가하는 등 2007년에는 723건 총 투자액이 5억 9,700만 불에 달하였음.

마. 이명박 정부(2008-2013)

(1) 현황

- 한·러 관계에서, 이명박 정부의 성과는 이 대통령이 2008년 9월 28-30일 러시아를 방문해 양국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후 이의 내실화를 위한 양자 협력을 실행해 온 점임.
- 이명박 정부 들어 한·러 정치·외교 관계의 두드러진 현상은 양국 정상 회담의 횟수가 점증하였다는 점임.
 - 이명박 대통령은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7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했으며, 푸틴 대통령과는 2012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음.

- 또한 한·러 양국은 2008년 9월 모스크바 정상회담을 계기로 외교·안보 분야에서 제1차관급 전략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지금까지 양국은 제4차 전략대화를 가졌음.
 - 양국은 전략대화를 통해 양자 이슈는 물론 북핵문제와 한반도 정세,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등 국제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양자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음.
- 또한 이명박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때마다 한반도의 비핵화,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 그리고 아·태 지역의 평화, 안보 및 발전을 위한 다자 간 협력체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PEC 등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음.
 - 또한 양국 정상은 핵무기 및 생·화학 무기 비확산, 국제테러리즘, 초국경 조직범죄, 기후변화, 식량안보, 에너지 안보, 해적, 사이버 범죄 등 비전통적 안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
- 한편 2008년 9월 말 이명박 대통령의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합의한 ‘한·러 대화 포럼’이 양국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11월, 2011년 11월 서울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각각 개최되었음.
 - 양국 대통령은 ‘한·러 대화 포럼’에 참석해 포럼 참석자들이 분과별로 양국관계 발전 및 협력 방안으로 합의한 제안사항을 경청하고, 이를 양국의 상대국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다짐하였음.
- 양국 간 경제협은 2008년 가을 발생한 세계적 경제위기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즉 양국 간 교역량이 2008년도 180억 달러이던 것이 2011년에는 212억 달러로 증가하였음. 하지만 한국의 대러 투자 누계 총액은 약 27억 달러에 불과하며, 이는 한국의 투자 잠재력에 비해서는 적은 편임.

(2) 평가

- 한·러 관계는 한·러 외교관계 정상화 이후 이명박 정부 들어 가장 좋은 협력관계로 발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이는 이명박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한·러 간 전략적·경제적 협력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빈번한 정상회담 등 다양한 형태의 고위급 회담 개최, 러시아의 투자환경 개선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對러 경협 확대, 빈번한 만남과 이에 따른 양국 대통령 간 우호관계 확립과 신뢰 증진,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자유주의적이고 시장주의적인 정책성향 및 현대화 정책 추진 등 때문임.

-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악화된 남북관계는 남·북·러 3각 협력을 통한 이명박 대통령의 ‘신 3대 실�크로드’, 즉 철의 실�크로드(TSR-TKR 연결), 에너지 실�크로드(가스관·송유관 연결), 녹색 실�크로드(농수산·임업 협력) 구상 실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음.

바. 박근혜 정부(2013-2017)

(1) 현황

- 박근혜 정부의 출범은 한·러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내실화 하면서 양국관계를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하였음.
 - 박근혜 정부는 러시아와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즉 러시아 등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하나의 대륙, 평화의 대륙, 창조의 대륙’을 건설한다는 정책,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즉 동북아 국가들과 연성안보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후 경성안보협력을 구체화하는 다자안보협력체의 구축,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즉 남북 간 신뢰증진을 통한 북한 문제 해결 등과 같은 정책들을 추진 하였음.
- 푸틴 대통령도 이들 정책에 화답해 2013년 11월 12~13일 주변 4강 중 첫 번째 정상으로 서울을 방문해 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35개 항목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음.
 - 또한 양국은 동 정상회담을 계기로 사증면제와 양국 내 문화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2개 협정, 그리고 경제·통상·투자·에너지 협력 등과 관련된 6개의 의정서를 채택하였음.
- 동 정상회담의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성과의 경우, 양국은 정례적인 상호 방문과 국제회의 계기 정상회담을 비롯한 최고위급 외교·안보 대화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음.
 - 특히 양국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간 정례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음. 또한 양국은 2차례에 걸친 ‘불곰사업(한·러 간 경협차관 상환을 통

한 방산협력)’ 과 다양한 군 인사교류를 통해 군사·방산 협력을 지속해 왔는데, 동 정상회담에서 양국 대통령이 군사기술협력이 양국관계 발전에서 주요 협력사업의 하나라는 인식을 공유해 러시아 군사기술 이전이 우선시 되는 제3차 불곰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기를 마련하였음.

- 이외에도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글로벌 차원은 물론 아태 지역 차원에서 양자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음.
- 민간 교류 분야의 경우,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간 정부, 의회, 재계, 학계 간 협력을 활성화하고 양자 간 문화, 체육, 청소년 교류를 다각화하기로 합의하였음.
- 또한 양국은 2014년 1월 1일 발효되는 양국 간 사증면제협정을 기념해 2014년과 2015년을 상호 방문의 해로 지정해 양국 국민간 상호 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음,
- 또한 서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측 학계, 경제계, 정부 인사들과 마지막 세션에 양국 대통령이 참석하는 ‘제3차 한·러 대화 포럼’을 개최해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광범위하게 논의, 제안하였음.

(2) 평가

- 그러나 박근혜 정부 초기 장밋빛 한·러 관계는 국내외 요인들, 즉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지원에 따른 미국, EU 등 서방세계의 대러 제재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제약을 받았음.
- 한편 박근혜 정부는 서방세계의 대러 제재 지속하에서 러시아의 중요성을 감안해 한·러 관계의 미·러 관계로부터의 탈동조화 노력을 기울였음.
- 즉 박근혜 정부는 대러 경제제재에 불참하면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행정책의 하나로 한·러 외교관계 정상화 25주년을 기념해 각계 인사 350여명이 참가한 ‘유라시아 친선특급’ 행사를 2015년 7월 중·하순 개최하여 양국 관계 발전을 추동하였음.
-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9월 2~3일에 블리디보스톡에서 개최된 제2차 동방경제포럼에 주빈으로 참석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 등을 실행하면서 양국 정상간 이해 제고 및 양자협력의 재활성화 추동, 극동지역에서 협력 비전과 협력 방안 제시, 사드 배치 이해 제고와 북핵정책 공조 재확인, 한·러 경협의 재활성화 기반 구축 등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음,

사. 문재인 정부(2017-현재)

(1) 현황

-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이를 위해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건설을 위한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 주변 4강과 협력 확대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 정책의 성공적 추진과 미래 성장동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2017년 하반기에 구성해 러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국가들과 경제 협력을 확대·심화하는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문재인 정부는 러시아 중시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상외교를 활발히 추진하였음. 즉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3년 동안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에서 2차례, 제3국에서 3차례 등 5 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음. 또한 이낙연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2019년 9월 중순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제4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여 푸틴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개최하였음. 따라서 지난 3년 동안 6차례의 정상급 외교가 개최되었음.
 - 다시 말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개월 후인 2017년 9월 초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제3차 극동경제포럼 참석을 활용해 푸틴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개최하였고, 동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였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활용해 푸틴 대통령에게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포함한 외교·안보 정책을 소개하면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를 구하였음.
 -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러 정책의 중시를 강조하면서 한·러 간 실질경협 증대를 위해 신북방정책을 추진한다면서 극동지역에서 양국 간 협력 부문으로 ‘9개 다리(9-bridge)’ (수산, 농업, 전력, 철도, 북극항로, 가스, 조선, 항만, 산업단지)를 제시하였음.
-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6월 21~23일 김대중 대통령의 국빈 방문(1999년 5월) 이후 19년 만에 모스크바를 국빈 방문하여, 푸틴 대통령과 크레믈린 대궁전에서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개최한 후 32항으로 구성된

‘한·러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음. 그리고 양국 대통령 임석하에 12건의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서명식(추가 7건의 MOU 서명식은 별도로 진행)이 개최되었음. 문재인 대통령은 이 외에도 국가두마(하원) 연설, 메드베데프 총리 면담, 한·러 우호 친선 행사, 한·러 비즈니스 포럼 연설, 한·멕시코전 월드컵 경기 관람 등과 같은 일정을 소화하였음.

-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2018년 11월 ASEAN 정상회의,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고, 북한 핵문제, 양자 경험 등 외교·안보·경제통상 협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논의와 합의를 하였음. 특히 오사카에서 개최된 2019 G20 정상회담은 푸틴 대통령이 4월 25일 블라디보스톡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가진 첫 정상회담 후에 개최된 관계로 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관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2) 평가

- 미국 등 서방세계의 대러 외교·경제 제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상기한 정상외교 추진 및 북방경협위 설립 등이 증명해 주듯이 문재인 정부는 국정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의 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해 대러 외교를 전임 정부와는 달리 적극적, 전향적으로 추진하였음.
 - 그러나 2020년 들어 돌발한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러 정치·외교 협력이 위축되고 있으나, 지난 3년 6개월 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현 정부는 그 동안 정상외교, 고위급 외교 또는 중앙정부·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 합의해온 협력사항 및 프로젝트를 계속 이행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외교적 과제를 갖고 있음.

3. 정책적 고려사항

- 현재 한·러 외교관계의 핵심 이슈와 목표는 북한 문제에 관한 협력 지속 및 강화, 사드배치, 중장거리 미사일 배치 등 미국의 대한국 군사·안보 정책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 경험 합의이행, FTA 체결, 신북방정책의 성과제고 등을 통한 실질 경험의 증대, 양국 간 외교·안보 협력의 유동

성 및 취약성 극복, 한·러 수교 30주년 행사의 성공적 마무리 등임.

- 이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양국 간 전략대화 네트워크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함.
 - 한·러 양국간 전략대화의 토대는 구축되었으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였음은 물론 낮은 수준의 전략대화가 유지되고 있음. 따라서 양국은 전략대화를 활성화시키는 물론 전략대화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과거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정상회담의 정례화’, ‘국가안보실간 협의 정례화’, ‘제1 외교차관급 전략대화’, ‘정책기획국장 협의’, ‘6자회담 협의’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러시아가 미국, 중국, 일본 등과 진행해 오고 있는 ‘2+2 회의’ (국방·외교 장관회의)의 틀을 출범시키는 물론 한국의 러·중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SCO옵저버 국가(Observer state) 또는 대화동반자(Dialogue partner)로의 참여를 통해 SCO와 낮은 수준에서라도 전략대화의 틀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미·러 관계로부터 한·러 관계의 사안별 탈동조화 외교를 추진해야 함.
 - 냉전시기는 물론 탈냉전시기에도 한·러 외교관계는 미·러 관계에 직·간접적으로 동조화되어 왔음.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응해 한·미 동맹 최우선주의를 견지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불가피한 현실이나 양국 간 협력의 잠재력 발현과 국익제고를 위해서라도 가능한 한 미·러 관계에 사안별 탈동조화하는 대러 외교를 지향해야 함.
 - 우리 나라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이 국제법에 위반된다는 유엔 총회의 결의안을 지지하면서도 미국 주도 대러 경제제재에 불참한 것이 좋은 사례임.
- 또한 양국 간 ‘전략적 경제 동반자관계’를 구축하는 외교·경제적 노력이 필요함.
 - 한·러 양국의 경협 잠재력은 매우 크나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서방세계의 대러 제재는 양국간 경협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음. 이에 따라 러시아의 한국의 대러 경협성과에 대한 실망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 러시아의 대한민국 정책에서 경제이익은 외교·안보 이익 보다 중시되고 있으며, 특히 제3기 푸틴 정부가 ‘유라시아 경제연합’과 ‘신 동방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그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음.
 -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러시아의 전략적 중요성과 북한 김정은 정권의

유동성을 감안해 먼저 ‘전략적 경제동반자관계’를 구축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내실화, 공고화시킬 필요가 있음.

-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과 사드배치의 부정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력 지속 유도해야 함.
 - 러시아는 중국과 연대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제재의 완화, 독자제재의 반대, 한국 내 사드배치와 중장거리 미사일 배치 반대 등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한국은 러시아와 전략적 소통의 강화해 이들 현안에 대한 러시아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끝으로 양국 간 외교관계는 물론 전반적인 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의회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코로나-19 대유행 지속에도 불구하고 수교 30주년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향후 양국 관계의 도약을 위한 토대를 쌓아야 함.